

# 한국 현대사 교육과 민주주의 서사

김정인\*

**초록** 본 연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한국사2』 교과서 8종의 한국 현대 민주주의 서사를 분석하고, 현재주의적 관점에서 재구성 방안을 제안한다. 2024년 12.3 계엄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며, 해방 이후 80년의 역사를 '현재를 이해하기 위한 현재사'로 소환했다.

교과서의 민주화 이전 민주주의 서사는 독재 정치 대 민주화운동의 이분법적 구도로 구성되어 있다. 독재 정치는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 항쟁 등 민주화운동의 배경으로 배치되며 사건 중심으로 서술된다. 그러나 반공 담론, 개발 담론, 민족 담론, 민중 담론 등 쟁점적 역사 담론에 대한 서술은 거의 없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서사는 정부와 시민사회를 민주주의 공고화의 주체로 설정하고 평화적 정권 교체를 강조하지만, 대부분 개론적 서술에 그치며 구체적인 역사 서사화가 부족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민주주의 서사 재구성을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민주화 이전 서사에서는 현재사적 쟁점이 된 역사 담론을 다룰 것, 둘째, 민주화 이후 서사에서는 기본적인거나 중요한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구체적 서사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1987년 이후 운동 사회의 형성과 주류 교체, 과거사 청산과 역사 전쟁 등을 역사 서사화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한국 현대사 교육, 민주주의 서사, 현재주의적 역사교육,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쟁점적 역사 담론, 역사 서사화

## 1. 머리말

1987년 이후 한국에서는 독재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평화적 정권 교체와 시민사회의 성장이 상징하듯 민주주의 공고화의 시대로 진입했다는 진보 서사가 뿌리를 내렸다. 2020년대에 들어와서는 세계로부터 식민과 분단을 경험한 신생 독립 국가로서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하고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유일한 국가로 인정받으면서 독재 정치는 과거 유물처럼 치부되었다. 하지만 12.3 계엄으로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계엄을 선포한 나라가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시도는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sup>1</sup>으로 좌절되었다. 하지만 국회가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 의해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다시 대통령 선거를 치른 6개월 동안에도 한국 민주주의는 여러 차례 퇴행의 위기를 경험했다. 2025년 3월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는 한국의 민주주의 단계를 ‘자유민주주의의 나라’에서 ‘선거 민주주의의 나라’로 강등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과 함께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sup>2</sup>

이러한 ‘지금 여기’, 즉 현재의 정치 경험은 해방 이후 분단, 전쟁, 반공, 극우, 개발, 독재의 역사부터 촛불시위와 2017년 대통령 파면에 이르기까지 80년의 과거사를 ‘계보화한’ 살아있는 역사로 소환했다. 즉 ‘현재를 이해하기 위한 현재사’(history of the present)로 만들었다.<sup>3</sup> 또한 그것을 인과론적이고 목적론적인 맥락에서 독재의 극복과 민주주의 승리라는 진보 서사로 인식하던 지적 풍토를 돌아보게 했다. 이러한 성찰은 나아가 “오늘날의 시대

1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탄핵 헌법재판소 결정문」(2025.4.4.).

2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는 해마다 179개 국가의 민주주의 지수를 측정해 민주주의 단계를 자유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 선거 독재 체제, 폐쇄된 독재 체제로 분류한다(「한국이 어쩌다...2년 연속 “독재화되고 있다” 박한 평가」, 『한겨레』, 2025. 3. 18.).

3 현재사에 대해서는 송충기(2020), 「현재주의(presentism)와 ‘현재사(history of the present)’」, 『역사교육』 154, 역사교육연구회 참조.

적 사회적 요구에 맞는”, 또한 “현재 우리 사회와 사람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친 역사를 이해”<sup>4</sup>하고자 하는 현재주의적 역사교육의 관점에서 한국 현대사 교육의 주된 골조인 민주주의 서사를 되짚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 현대사 교육에서 기성의 민주주의 서사를 분석하고 그것의 현재주의적 대안을 검토하는 데에 있어 역사 교과서는 유의미한 분석 대상이다. 역사 교과서의 내용 선정은 중요성, ‘의미있는 역사’<sup>5</sup> 사회적 관점 등을 고려하면서 공론적 절차를 거쳐 개발된 교육과정에 의해 이뤄진다. 그러므로 역사 교과서 내용은 학교 교육만이 아니라 공공역사 실천의 장에서 핵심 준거로 작동한다. 또한 그와 같은 위상과 영향력 때문에 역사 교과서는 역사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진 전장이기도 했다. 2000년대 이후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와 ‘한국사’ 과목을 통한 한국 현대사 교육이 꾸준히 이뤄졌다. 또한 한국 현대사 교육에서 민주주의 서사는 중심축의 하나였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한국 근현대사’ 과목에서 민주주의 서사는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이라는 중주제로 배치되었다.<sup>6</sup> ‘한국사’ 과목은 2007 개정 교육과정으로 등장한 이래 ‘(자유)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이라는 민주주의 서사를 유지했다. 2018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한국사’ 과목에 1987년 이후 현대사가 ‘6월 민주 항쟁과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중주제로 배치되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러서는 ‘한국사2’ 과목에서 해방 이후 한국 현대사를 1987년 민주화를 전후로 ‘대한민국의 발전’과 ‘오늘날의 대한민국’이라는 두 개의 대주제로 나누는 변화가 일어났다. 이로써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서사가 본격적으로 역사교육 내용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본

4 김한중(2024), 『역사교육 강의』, 책과함께, p. 153, p. 161.

5 ‘의미있는 역사’의 범주에는 기본적으로거나 중요한 역사적 사실, 역사 공부에 도움이 되는 지식, 비판적 사고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지식, 학습자의 시민적 실천에 도움이 되는 역사적 문제 등이 포함된다(김한중(2023), 「‘의미있는 역사’에 기초한 중·고등학교 역사 교수요목 구성방안」, 『역사교육연구』 45, 한국역사교육학회, pp. 109-110.; 김한중(2024), pp. 154-162.).

6 교육부(1997), 『사회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고에서는 이러한 민주주의 서사의 배치 변화를 염두에 두면서 2022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고등학교에 배포된 8종의 『고등학교 한국사2』 교과서(이하 교과서)의 한국 현대 민주주의 서사를 분석하고자 한다.<sup>7</sup> 먼저 교과서의 민주주의 서사를 독재 정치 대 민주화운동의 이분법적 구도로 구성한 민주화 이전과 정부와 시민사회 주도의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을 서술한 민주화 이후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현재 주의적 관점의 민주주의 서사 재구성을 위한 시론으로 민주화 이전 민주주의 서사에서는 현재사적 쟁점이 된 역사 담론을 다룰 것과 1987년 이후 민주주의 서사에서는 앞서 언급한 ‘의미있는 역사’의 속성인 기본적인거나 중요한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역사 서사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sup>8</sup>

- 
- 7 본래 9종의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으나 2025년 7월 14일 교육부가 한국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검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검정을 취소해 분석에서 제외했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준거해 서술되고, 또한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새로 집필되는 과정에서 검정 교과서 간의 상호 검토가 이뤄지면서 영향을 주고받는다. 『고등학교 한국사2』의 민주주의 서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8종의 공통점에 기반해 설명할 때는 ‘교과서’라고 통칭하고자 한다. 8종의 공통점의 사례를 들거나 개별 교과서의 특징을 설명할 때는 가독성을 고려해 해당 교과서의 출판사명을 사용하고자 한다.
- 8 선행 연구로는 민주시민교육의 관점에서 한국 현대사 서술과 민주주의 서사를 분석하고 교육과정에서의 1987년 이후 역사 서술 방안을 제안한 강화정의 연구가 있다[강화정(2014), 「교과사 한국사 교과서의 현대사 서술과 민주주의 교육」, 『역사교육연구』 20, 한국역사교육학회; 강화정(2015), 「역사 교사의 민주주의 인식과 서사 형성」, 『역사교육연구』 21, 한국역사교육학회; 강화정(2018), 「한국사 교육과정에서 ‘1987년 이후의 역사’ 서술의 필요성과 구성 방안 모색」, 『역사교육연구』 30, 한국역사교육학회; 강화정(2021), 「학생의 삶에 중심을 둔 현대사 교육, 어떻게 만들어갈까?」, 『역사교육연구』 41, 한국역사교육학회]. 본고는 ‘지금 여기’ 현재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계보학적으로 과거를 탐구하는 현재사적 관점과 현재를 이해하기 위한 역사의 구성과 교육을 강조하는 현재주의적 역사교육의 관점에서 한국 현대사 교육에서의 민주주의 서사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 2. 민주화 이전 민주주의 서사: 독재 정치 대 민주화운동

교과서의 민주화 이전 민주주의 서사는 독재 정치 대 민주화운동의 구도로 서술되어 있다. 이 구도는 한국 현대사 교육에 민주주의 서사가 포함된 이래 유지된 관행이다. 그래서 교과서마다 민주화 이전 민주주의 서사의 구성과 내용에 차이가 거의 없다.

구체적인 분석에 앞서 먼저 상기할 점은 독재 정치 대 민주화운동의 구도가 미군정기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시기까지의 서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해방 정국이라 불리는 이 시기는 민족주의 서사로 구성되어 있다. 미래엔을 예로 들면 미군정기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를 다룬 소단원과 학습주제는 [표 1]과 같다.

이 목차에 드러나듯이 교과서는 미군정기를 다루고 있음에도 미군정의 통치에 대한 서술은 없고 미군정의 점령군적 성격을 강조한다.

1945년 9월, 미군이 서울에 들어와 조선 총독의 항복을 받고 군정청을 설치하여 남한 지역을 직접 통치하였다. 미군정은 원활한 통치를 위해 기

[표 1] 미래엔의 미군정기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의 소단원과 학습주제<sup>9</sup>

소단원	학습주제
2. 광복과 국토의 분단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되다/미군과 소련군의 한반도 분할 점령/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와 국내의 갈등
3. 통일 정부 수립 운동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무기 휴회되다/좌우합작운동을 전개하다/남북협상이 추진되다/단독 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
4. 대한민국 정부 수립	5.10총선거로 제헌 국회가 구성되다/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다(이하 생략)

9 강승호 외(2025), 『고등학교 한국사2』, 미래엔, pp. 68-74.

존 조선 총독부의 체제와 법령을 대부분 유지하였다. 또한 미군정만이 38도선 이남의 유일한 정부임을 밝히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 조선 인민 공화국 등의 대표성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sup>10</sup>

5.10 총선거는 미군정하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입법의원의원선거법(立法議院議員選舉法) 제정과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수정을 거쳐 공포된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해 치러졌다.<sup>11</sup> 하지만 교과서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서사는 생략한 채 5.10 총선거가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이뤄진 점을 부각한다.

1948년 5월 10일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선거가 가능한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국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5·10 총선거).<sup>12</sup>

교과서 중 비상교육이 유일하게 5.10선거 실시 주체로 미군정을 제시한다.

미군정은 남한만의 총선거 시행을 발표하고 1948년 5월 10일 국회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하였다.<sup>13</sup>

그런데 미소의 한반도 분할 점령,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 미소공동위원회의 개최와 결렬, UN에 의한 남한만의 선거 실시로 자주적 통일국가 건설이 좌절되고 분단 정부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는 민족주의 서사는 한국 현대사 교육만이 아니라 한국 현대사 연구에서도 여전히 굳건

10 노대환 외(2025), 『고등학교 한국사2』, 동아출판, p. 77.

11 김정인(2025a), 『모두의 민주주의』, 책과 함께, pp. 18-30.

12 정요근 외(2025), 『고등학교 한국사2』, 천재교과서, p. 86.

13 도면희 외(2025), 『고등학교 한국사2』, 비상교육, p. 83.

하다. 한국역사연구회가 2022년에 펴낸 『시민의 한국사2』의 ‘제8편 현대’의 1장 ‘해방과 분단, 1945-1953’의 틀과 내용이 교과서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다. 예를 들어 이 책에서도 “1948년 5월 10일 유엔 감시하에 남한 지역에서 총선거(5.10선거)를 실시해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제헌국회를 구성했다”라고 서술하는 데 그칠 뿐 총선거를 가능하게 만든 입법 절차에 대한 언급은 없다.<sup>14</sup>

이처럼 교과서의 한국 현대사 서술은 민족주의 서사로 시작하나 이승만 정부부터 1987년 민주화까지의 서사에서는 독재 정치 대 민주화운동의 이분법이 작동한다. 그리고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민주화운동이 시기 구분의 준거가 되고 독재 정치는 민주화운동의 배경으로 배치된다.

동아출판은 민주화 이전 역사를 다루는 중단원 제목에 ‘민주화운동’을 내세우고 소단원 제목을 민주화운동의 대표적 사건인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 항쟁’으로 뽑았다. 독재 개념은 ‘1960년 4월, 독재 정

[표 2] 동아출판 중단원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소단원과 학습주제<sup>15</sup>

소단원	학습주제
01. 4.19 혁명	3.15부정선거를 저지르다/시민들, 부정선거에 저항하다/1960년 4월,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다/장면 내각이 세워지다
02. 5.16 군사 정변과 10월 유신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나다/한일 협정을 체결하다/베트남 전쟁에 국군을 파병하다/3선 개헌으로 장기 집권을 꾀하다/10월 유신으로 장기 독재를 꾀하다/유신 체제에 맞서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다/유신 체제가 막을 내리다.
03. 5.18 민주화운동	12.12 군사 반란이 일어나다/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다
04. 6월 민주 항쟁	신군부, 불법적으로 정권을 장악하다/전두환 정부가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다/전두환 군부 독재에 저항하다/전두환 정부, 국민들의 직선제 요구를 거부하다/시민들,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다

14 한국역사연구회(2022), 『시민의 한국사2』, 돌베개, p. 347.

15 노대환 외(2025), pp. 98-108.

권을 무너뜨리다’, ‘10월 유신으로 장기 독재를 피하다’, ‘전두환 군부 독재에 저항하다’ 등의 학습주제에 등장한다. 그런데 동아출판의 경우는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순으로 독재 개념 사용 빈도가 높다. 반면 미래엔은 박정희 정부보다 이승만 정부 서술에서 독재 개념을 많이 쓴다. 또한 군사 독재의 출발점인 군사정부와 1960년대 박정희 정부 서술에서는 독재 개념을 쓰지 않는다. 1970년대 유신 체제를 설명하면서는 ‘권위주의적 독재 체제’와 ‘유신 독재’라고 하여 두 번 독재 개념을 사용한다. 그리고 전두환 정부에 대해서는 군사 독재 개념을 쓴다. 미래엔과 달리 대부분 교과서는 군사정부와 박정희 정부에 대해 독재, 군사 독재 정권, 유신 독재, 독재 체제, 장기 독재, 반공 독재 체제, 1인 독재 체제, 유신 독재 체제 등의 개념을 쓴다. 전두환 정부에 대해서도 미래엔과 함께 리베르스쿨, 씨마스, 해냄에듀가 군사 독재 혹은 군부 독재 개념을 사용한다. 반면 비상교육은 이승만 정부 서술에서만 독재, 독재 체제, 독재 권력 등의 개념을 사용할 뿐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 서술에서는 독재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처럼 교과서는 독재 개념 사용에 있어 차이를 보이면서도 민주화 이전 정치 서사는 공통적으로 각 정부의 독재 정치를 대표하는 사건 중심으로 구성한다. 이승만 정부는 발취개헌, 사사오입 개헌, 진보당 사건, 3.15 부정선거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군사정부와 박정희 정부는 5.16 군사 정변, 삼선개헌, 유신 헌법, 긴급 조치를 부각해 서술한다. 전두환 정부는 12.12 군사 반란으로 시작해 5.18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 설치, 삼청교육대 사건, 보도 지침 사건,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탄압,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4.13 호헌 조치까지 독재 정치의 양상을 다른 정부에 비해 자세히 다룬다. 즉, 교과서는 40여 년간의 독재 정치를 사건사적 맥락에서 민주화운동의 배경으로 다룬다. 각 정부의 독재 정치가 갖는 공통점과 차이점, 그것을 아우르는 독재 정치의 특질 등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처럼 독재 정치에 대한 체계적인 서술이 결핍된 채 독재 정치가 민주화운동의 배경 서사로 배치되면서 박정희의 유신 체제가 가장 폭압적인 군사 독재였

다는 역사 상식과 달리 교과서에는 전두환 정부가 가장 강도 높은 독재 정치로 국민을 억압했다는 서사가 등장한다.

다음으로 민주화 이전 민주주의 서사의 다른 한 축인 민주화운동 서술을 살펴보자.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미래엔은 민주화운동인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 항쟁’을 배경, 전개, 결과/영향 순으로 상세히 서술한다.

앞서 [표 2]에서 살펴본 동아출판의 소단원 및 학습 제목과 비교하면 알 수 있듯이 교과서의 민주화운동 서술은 대동소이하다. 예를 들어 교과서는 민주화운동의 의의를 독재 정치를 무너뜨린 혁명·운동·항쟁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찾는다.

4·19 혁명은 학생과 시민들이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민주주의 혁명으로,

[표 3] 미래엔의 민주화운동 서술의 내용 체계<sup>16</sup>

민주화운동	내용 체계
4.19 혁명	-배경: 3.15 부정 선거 -전개: 부정 선거 규탄 시위 → 김주열 사망 → 시위 확산 → 대학교수 단 시국 선언 → 이승만 대통령 사임(4.26) -결과: 내각 책임제 개헌, 장면 내각 출범
5.18 민주화운동	-배경: 12.12사태 → 신군부 세력이 민주화 요구 탄압, 비상계엄 전국 확대 -전개: 광주 지역 시위 → 계엄군의 발포 → 시민군 조직 → 계엄군이 시민군 무력 진압 -영향: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기반이 됨.
6월 민주 항쟁	-배경: 전두환 정부의 강압적 통치,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 -전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 정부의 4.13 호헌 조치 → 호헌 반대 시위 전개 → 이한열의 최후탄 피격 → 6.10국민대회 개최, 시위 확산 → 노태우, 6.29선언 -결과: 대통령 직선제를 골간으로 한 개헌 단행

16 강승호 외(2025), p. 110.

이후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sup>17</sup>

신군부의 권력 장악과 무자비한 폭력에 맞선 5.18 민주화운동은 이후 전개된 민주화운동의 밑거름이 되었고, 나아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 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sup>18</sup>

학생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한 6월 민주 항쟁으로 군사 독재가 끝났고 민주화의 진전이 이루어졌다. 높아진 시민 의식은 이후 민주화가 더욱 발전되는 밑거름이 되었다.<sup>19</sup>

마지막으로 12.3 계엄을 상기하면서 독재 정부가 아니었던 장면 정부의 붕괴와 5.16 군사 정변을 교과서는 어떻게 서술했는지 짚어보자. 동아출판은 “장면 내각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분출된 민주화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였다.”<sup>20</sup>라고 장면 정부의 한계를 서술하고 5.16 군사 정변에 대해서는 “군부 세력은 장면 내각의 무능과 사회 혼란 수습을 명분으로 각계에서 분출된 민주적 요구를 억압하고 반공을 내세워 혁명 공약을 발표하였다.”<sup>21</sup>라고 쓰고 있다. 해냄에듀는 5.16 군사 정변이 “4.19 혁명 이후 분출된 시민들의 민주적 요구를 탄압하였다.”<sup>22</sup>라고 서술하고 미래엔은 5.16 군사 정변으로 “4.19 혁명 이후 요구되었던 민주적 개혁 정책은 실현되지 못하고 통일운동도 중단되었다.”<sup>23</sup>라고 쓰고 있다. 즉 장면 정부의 한계가 곧 독재로의 회귀를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서술한다. 반면 천재교과서

17 도면희 외(2025), p. 97.

18 정요근 외(2025), p. 110.

19 김보림 외(2025), 『고등학교 한국사2』, 리베르스쿨, p. 111.

20 노대환 외(2025), p. 100.

21 노대환 외(2025), p. 102.

22 조한경 외(2025), 『고등학교 한국사2』, 해냄에듀, p. 90.

23 강승호 외(2025), p. 88.

는 “장면 정부는 이와 같은 요구(민주화 요구) 수용에 소극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탄압하는 모습을 보여 시민들의 반발을 초래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나 장면 정부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sup>24</sup>라고 서술해 사회 혼란을 구실로 군사 정변을 일으킨 세력의 입장에 유리한 서사를 제시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과서의 민주화 이전 민주주의 서사는 독재 정치와 민주화운동의 이분법적 구도에 기반해 있다. 즉 민주화 이전 민주주의 역사는 독재 정치에 반발해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 항쟁 등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면서 민주화를 이뤘다는 서사로 이뤄져 있다. 그런데 해남에듀의 경우 독재 정치의 흐름을 독재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민주주의 억압, 축소, 후퇴 등으로 표현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승만 정부의 독재 정치를 다룬 학습 주제는 ‘반공주의로 민주주의를 억압하다’이고 한국전쟁으로 “남과 북에서 민주주의와 다원주의적 정치 지형이 축소되었다.”<sup>25</sup>라고 서술한다. 또한 ‘5.16 군사 정변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다’라는 소단원 제목을 쓴다. 이는 독재 정치 대 민주화운동의 이분법적 구도를 벗어나 민주주의라는 일관된 잣대로 민주주의 서사를 구성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 3.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서사: 민주주의 공고화의 주체로서의 정부와 시민사회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교과서는 그 과정을 이끈 주체를 정부와 시민사회로 나눠 서술한다.

먼저 정부 주도의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 서사를 살펴보면 [표 4]에서

24 정요근 외(2025), p. 101.

25 조한경 외(2025), p. 77.

[표 4] 교과서의 정부 주도의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 서사를 다룬 소단원과 학습주제

출판사	소단원	학습주제
동아출판	평화적 정권교체	다시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다/문민정부가 들어서다/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다/참여 정부가 출범하다/여야 정권이 다시 교체되다/대통령이 탄핵되고 정권이 교체되다 <sup>26</sup>
리베르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룬다	노태우 정부의 등장/문민정부의 탄생/여야간 평화적 정권교체/참여정부의 출범/실용주의를 내세운 정부/경제 민주화를 표방한 박근혜 정부/남북 평화 정책을 추진한 문민정부 <sup>27</sup>
미래엔	평화적 정권 교체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다/김영삼 정부, 지방 자치 시대를 열다/김대중 정부,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룬다/노무현 정부, 권위주의 청산을 내세우다/이명박 정부, 실용주의를 표방하다/박근혜 정부, 창조 경제를 내세우다/평화적 정권 교체가 정착되다 <sup>28</sup>
비상교육	민주화가 진전되다	민주주의의 진전/평화적 정권 교체의 정착 <sup>29</sup>
씨마스	평화적 정권 교체와 민주주의의 발전	민주주의의 진전/평화적 정권 교체의 정착/과거사 통합을 위한 국민 통합 노력 <sup>30</sup>
지학사	평화적 정권 교체의 정착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다/금융 실명제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다/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어지다/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다 <sup>31</sup>
천재교과서	평화적 정권 교체와 민주주의의 진전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다/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다 /평화적 정권 교체가 자리 잡다/촛불의 힘이 정권을 바꾸다 <sup>32</sup>
해냄에듀	여야 정권이 교체되고 남북 관계가 변화하다	시민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다/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정착하다/남북관계가 변화하다 <sup>33</sup>

26 노대환 외(2025), pp. 128-130.

27 김보림 외(2025), pp. 132-134.

28 강승호 외(2025), pp. 116-119.

29 도면희 외(2025), pp. 128-129.

30 신주백 외(2025), 『고등학교 한국사2』, 씨마스, pp. 136-138.

31 최병택 외(2025), 『고등학교 한국사2』, 지학사, pp. 132-134.

32 정요근 외(2025), pp. 136-138.

33 조한경 외(2025), pp. 130-132.

[표 5] 미래엔의 '6월 민주 항쟁 이후 민주화 과정' 정리 내용<sup>34</sup>

정부	민주화 관련 정책
노태우 정부	여소 야대 정국 극복을 위한 3당 합당, 북방정책
김영삼 정부	금용 실명제 및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역사 바로 세우기' 추진, 외환 위기 발생
김대중 정부	최초의 여야 간 평화적 정권 교체, 외환위기 극복,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노무현 정부	과거사 청산 추진, 행정 수도 이전 계획 추진
이명박 정부	여야 정권 교체, 서울 G20 정상 회의 개최
박근혜 정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당선, 한정 사상 최초로 파면(탄핵 가결)
문재인 정부	복지 정책 강화, 검찰 및 언론 개혁,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

알 수 있듯이 동아출판, 리베르스쿨, 미래엔처럼 정부별로 학습주제를 나눠 서술한 경우와 천재교과서처럼 평화적 정권 교체의 양상을 기준으로 나누는 경우 등이 있다. 그럼에도 교과서는 공통적으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서사에서 평화적 정권 교체의 정착을 강조한다.

그리고 미래엔이 단원 마무리에서 정리한 [표 5]의 '6월 민주 항쟁 이후 민주화 과정'<sup>35</sup>에 드러나듯이 민주화 이후 각 정부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공고화를 상징하는 정책과 사건 중심으로 서술한다.

그런데 교과서는 평화적 정권 교체를 강조하지만 여야 교체의 의미로만 서술할 뿐 정치 노선상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 간의 정권 교체라는 점은 서술하지 않는다. 이는 민주화 이후 현실 정치 속에서 작동해 온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의 역사처럼 논쟁성을 띤 현재사를 역사로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의 결핍에서 기인한다. 또한 21세기에 들어 세 번의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과 두 번의 대통령 파면을 경험했으므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서사에서 대통령 탄핵은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사건이 되었다. 동아 출판은 '대통령 탄핵의 의미'라는 코너를 마련해 대통령 탄핵 절차, 박근혜

34 강승호 외(2025), pp. 114.

35 강승호 외(2025), p. 144.

해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결정문 등을 소개하고 대통령 탄핵에 대해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불신임을 보여주는 합법적이고 가장 강력한 제도”라고 설명한다.<sup>36</sup> 지학사와 해냄에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 일부를 소개한다.<sup>37</sup>

민주화 이후 정부와 함께 민주주의 공고화의 주체로 활약한 시민사회를 서술한 교과서의 소단원과 학습주제를 [표 6]에서 살펴보면, 미래엔, 비상교육, 씨마스, 해냄에듀는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의 성장을 하나의 소단원으로 다룬다. 동아출판, 리베르, 천재교과서는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시민사회의 성장을 다룬다. 그런데 지학사는 시민사회의 개념을 쓰지 않는다.

미래엔은 시민사회를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구성원의 자율적 참여와 행동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기능을 원활하게 작동하는 사회’로 정의하고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서의 주체적 역할에 주목한다.

6월 민주 항쟁 이후 민주화가 진전되고 시민사회의 활동 공간이 넓어지면서 시민이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성장한 시민사회는 국가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운동의 기반이 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시민단체가 조직되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시민사회의 요구를 관철하려 하였다.<sup>38</sup>

해냄에듀는 시민운동을 “비영리와 공공성을 지향하면서 정부 정책이나 사회 문제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발적인 사회 활동”<sup>39</sup>으로 정의하고 개혁운동, 여성운동, 장애인 운동, 환경 운동 등을 소개한다. 씨마스는 “1990년대 들어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사회적 민주화를 확대하기 위한

36 노대환 외(2025), p. 130.

37 최병택 외(2025), p. 134; 조한경 외(2025), p. 131.

38 강승호 외(2025), p. 120.

39 조한경 외(2025), p. 134.

[표 6] 교과서의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을 다룬 소단원과 학습주제

출판사	소단원	학습주제
동아출판	민주주의의 성장	지방 자치제가 확대되다/시민사회가 성장하다 <sup>40</sup>
리베르	시민사회가 성숙해 가다	지방 자치의 종류와 필요성/지방 자치의 확대/시민 사회의 성장과 노동 환경운동/경제 정의, 성평등 등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 <sup>41</sup>
미래엔	시민사회의 성장	시민 사회가 성장하다/다양한 시민운동의 발전 <sup>42</sup>
비상교육	시민사회가 성장하다	시민운동의 성장/시민운동의 다양화/시민의 정치 참여 확대 <sup>43</sup>
씨마스	시민사회의 성장	사회 민주화의 확산과 시민운동의 성장/다채롭게 전개된 시민 사회 운동 <sup>44</sup>
지학사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노력	노동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어지다/농민 생활권을 보호하려는 운동이 전개되다/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시민 참여를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다/저출생 고령화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sup>45</sup>
천재교과서	지방 자치 발전과 시민의 정치 참여 확대	지방 자치가 뿌리를 내리다/과거사 정리를 위해 노력하다/노동자와 농민운동이 활성화되다/시민운동이 민주주의와 기본권을 신장시키다/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하다 <sup>46</sup>
해냄에듀	시민운동과 인권 의식이 성장하다	다양한 시민운동이 전개되다/인권 의식이 성장하다/과거사 청산을 위한 노력/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다/생태 환경의 변화와 기후 위기 행동 <sup>47</sup>

시민운동이 활성화되었다”<sup>48</sup>라며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 참여연대, 여

40 노대환 외(2025), p. 132.

41 김보림 외(2025), pp. 136-137.

42 강승호 외(2025), pp. 120-121.

43 도면희 외(2025), pp. 131-133.

44 신주백 외(2025), pp. 140-141.

45 최병택 외(2025), pp. 136-137.

46 정요근 외(2025), pp. 140-142.

47 조한경 외(2025), pp. 134-136.

48 신주백 외(2025), p. 140.

성 단체연합, 환경 운동 연합 등을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소개한다.

21세기에 들어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과 촛불집회에 대한 서술을 살펴보면, 교과서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를 소개한다. 비상교육은 시민의 정치 참여 확대라는 관점에서 “2000년대 이후 시민들은 촛불집회라는 평화적 시위를 열어 사회의 다양한 사안에 의견을 표출하였다”<sup>49</sup>라고 서술하고 2002년 미군 장갑차 사고로 숨진 중학생 추모 촛불집회,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2014년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촛불집회, 2016년 국정 농단의 진상 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등을 소개한다. 동아출판은 촛불집회를 “항의나 추모를 목적으로 하는 비폭력 평화 시위의 한 방식”<sup>50</sup>으로 소개하며 21세기형 민주화 투쟁의 하나로 정의한다. 씨마스는 촛불집회의 의미가 주권 국민의 등장과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에 있다고 강조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촛불집회’라는 코너에서 2000년대부터 일어난 촛불집회를 발생순으로 소개하고 다음과 같은 의미를 부여한다.

본격적인 촛불집회는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여중생들을 추모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권을 지키려는 방향으로 확대되었고, 2016년에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발전하였다. 시민이 평화적으로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열린 촛불집회는 국민 주권의 권리를 실현한 것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다.<sup>51</sup>

교과서는 오늘날 사회 문제의 해결 주체로도 정부와 시민사회에 주목한다. 씨마스와 비상교육은 다문화 사회 문제를 다루면서 정부와 시민사회

49 도면회 외(2025), p. 133.

50 노대환 외(2025), p. 131.

51 신주백 외(2025), p. 139.

의 노력을 동시에 서술한다.

한국 사회는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를 앞두고 여전히 종교 등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정부와 시민사회가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sup>52</sup>

다문화 사회는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하기 때문에 여러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다문화 구성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와 시민사회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sup>53</sup>

반면 미래엔의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들의 적응을 돕고 있다.”<sup>54</sup>라는 서술처럼 해결 주체로 정부만을 언급한 경우도 있다. 그런데 교과서에는 민주주의 사회의 골간으로 작동하는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거버넌스, 즉 협치에 대한 서술이 거의 없다. 많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정부가 일방적인 정책을 밀어붙일 수 없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이다. 정부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기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시민단체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함께 정부와의 협치를 통한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sup>55</sup> 교과서는 이와 같은 거버넌스의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미래엔, 동아출판, 리베르스쿨은 대표적 거버넌스인 노사정위원회를 소개한다.

52 신주백 외(2025), p. 146.

53 도면희 외(2025), p. 139.

54 강승호 외(2025), p. 129.

55 이동수(2005), 「한국의 정부와 시민사회: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NGO연구』 3-1, 한국 NGO학회, pp. 194-195.

근로자, 사용자,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합의체이다. 정리 해고제의 즉시 도입과 사회 보장 제도의 확충, 기업 경영 투명성 제고 등 외 환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을 체결하였다.<sup>56</sup>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과서의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서사는 민주주의 공고화의 주체인 정부와 시민사회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평화적 정권 교체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그것이 보수세력과 진보세력 간의 권력 교체라는 점을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민주주의 사회를 이루는 근간인 정부와 시민사회의 거버넌스 역사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

## 4. 한국 현대사 교육에서 민주주의 서사 재구성을 위한 제언

### 4.1. 쟁점적 역사 담론에 기반한 서사의 도입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교과서의 민주화 이전 민주주의 서사는 독재 정치 대 민주화운동의 구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곧 정치적 사건과 운동적 사건, 즉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 현대사 교육이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2010년대 이후 한국 현대사 연구에서는 민주화 이전 시기에 제기된 쟁점적 역사 담론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다.<sup>57</sup> 민주화 이전 역사가 ‘지금 여기’에서 사건이 아닌 담론으로 재구성되어 정치와 운동의 정당성 논리로 작동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현재주의적 역사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마찬가지로 현재주의적 역사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 근·현대

56 강승호 외(2025), p. 125.

57 오제연(2016), 「연구의 확장, 새로운 모색, 대화의 부재」, 『역사학보』 231, 역사학회, pp. 100-103.

사'와 '한국사' 과목의 교과서가 역사 전쟁의 싸움터 역할을 하면서 치열한 담론 투쟁이 전개된 만큼 쟁점적 역사 담론에 기반한 민주주의 서사 교육은 중요하다.<sup>58</sup>

민주화 이전 민주주의 서사에서 쟁점으로 꼽을 수 있는 역사 담론으로는 지배담론으로 기능한 반공 담론과 개발 담론, 대항 담론으로 기능한 민족 담론과 민중 담론, 그리고 대항 담론인 동시에 지배담론이기도 했던 민주주의 담론이 있다.

12.3 계엄의 주도 세력이 독재로의 퇴행을 시도하면서 내세운 자유민주주의의 뿌리를 1950년대 반공 정책을 합리화한 반공 민주주의에서 찾을 수 있듯이, 반공 담론은 해방 80년의 역사만큼 오래됐고 극우 논리로 여전히 작동하는 쟁점적 역사 담론이다. 그런데 교과서는 반공 담론을 다루지 않는다. 다만 반공, 반공 이념, 반공주의가 이승만과 박정희 정부가 독재 정치의 수단으로 사용된 사례를 서술할 뿐이다.

여수 순천 10.19 사건 이후 위기감을 느낀 이승만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 강력한 반공 정책을 실시하였다.<sup>59</sup>

이승만 정부는 반공주의를 내세워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경향신문을 폐간하는 등 언론을 통제하며 독재 체제를 강화했다.<sup>60</sup>

5.16 군사 정변으로 집권한 군부 세력은 반공을 국시로 내걸고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을 탄압하였다.<sup>61</sup>

58 강화정(2015), pp. 54-55.

59 김보림 외(2025), p. 84.

60 정요근 외(2025), p. 96.

61 강승호 외(2025), p. 134.

비상교육은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의 독재 정치의 공통점으로 “반공을 내세우며 독재를 강화”<sup>62</sup>한 점을 꼽는다. 그런데 교과서에서 반공 개념은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에 한해 등장한다. 또한 반공주의의 제도적 장치인 국가보안법의 경우, 이승만 정부에서 제정되거나 개정된 사실을 주로 서술한다. 동아출판과 비상교육은 전두환 정부에서 민주화운동을 구속하는 데 국가보안법이 이용된 사실을 서술한다. 그런데 박정희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정권 유지를 위한 억압 장치로 사용한 사실을 서술한 교과서는 없다.

개발 담론은 산업화 대 민주화의 프레임에서 산업화를 정당화하는 논리로서 지금도 현실을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다. 그런데 교과서가 쟁점적 역사 담론을 거의 다루고 있지 않음에도 몇몇 교과서는 별도의 코너를 통해 개발 담론을 둘러싼 논쟁을 다루고 있어 주목된다. 미래엔은 개발 담론과 관련한 두 가지 논쟁을 제시한다. 하나는 ‘박정희 정부의 성장 중심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라는 제목으로 경제 개발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에 관련된 사료를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개발과 민주화의 선후 관계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보여준 다음,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도록 한다.

- 긍정적 평가: 경제가 일정 수준에 올라 중산층이 두터워져야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자유를 부득이 유보하고 경제 발전을 우선시한 박 전 대통령의 생각이 옳았다는 것이다.
- 부정적 평가: 경제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가혹한 인권 탄압과 고문, 유신 독재로 국민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준, 우리 역사에서 가장 긴 18년간의 독재 정권이었다.<sup>63</sup>

62 도면회 외(2025), p. 93; 김보림 외(2025), p. 105.

63 강승호 외(2025), p. 102.

다른 하나의 논쟁에서는 개발의 주체가 정부, 기업인, 국민 중 누구인지를 묻는다. “한강의 기적”을 일궈 낸 원동력은 무엇일까?”라는 제목으로 개발의 주체로 수출 주도형 산업화를 이끈 정부, 도전 정신과 결단력을 발휘한 기업, 헌신적인 국민을 제시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데 영향을 준 원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도록 한다.

- (가) 번영의 외길은 수출뿐이다: 정부는 경제 개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수출 주도형 산업화를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는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빠른 성장을 달성하였다.
- (나) 캔두이즘(할 수 있다는 정신): 기업인들은 도전 정신과 결단력으로 해외 시장에 뛰어들어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고 수출을 크게 늘렸다. 일단 부딪혀 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신념은 한국 기업가 정신을 상징한다.
- (다) 글뤽 아우프(오늘도 무사히): 땀 흘려 일한 국민은 경제 발전의 기둥이었다. 낮은 임금과 곡물 가격을 감내한 노동자·농민, 해외에서 하루의 무사를 기원하며 고생한 파독 광부·간호사 등의 헌신이 있었다.<sup>64</sup>

동아출판은 ‘한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논쟁적 개발 담론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상호 토론을 제시한다.

- A: 자본과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한국 경제가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경제 개발 계획을 추진하였기 때문이야.
- B: 한국인들의 높은 교육열로 인적 자본이 빠르게 형성될 수 있었고, 높은 저축률은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에 보탬이 되었어.
- C: ‘한강의 기적’은 노동자와 농민, 서독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 베트남

전쟁에 파병된 군인들, 그리고 자기 영역에서 묵묵히 일한 사람들의 희생 속에서 가능했어. 이들이 경제 성장의 주역이야.<sup>65</sup>

씨마스는 ‘산업화와 민주화, 두 갈래의 길’이라는 주제 탐구에서 ‘통일 준비로써 조국 근대화가 우선’이라는 박정희의 주장과 ‘민주주의가 나라의 근본’이라는 3.1민주 구국 선언을 사료로 제시하고 두 주장을 비교하면서 양자의 미래 전략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찾고 두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 방안을 토론하는 탐구 활동을 제안한다.<sup>66</sup> 개발 담론에 기반한 산업화와 민족·민주·민중 담론에 기반한 민주화의 이분법적 프레임이 오늘날에도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반공 담론과 개발 담론이 지배담론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면 민족 담론과 민중 담론은 대항 담론적 성격이 강하다. 이승만 정부에서 반공 담론에 짓눌려 제대로 전개되지 못한 민족 담론은 4.19 혁명 직후 통일운동이 일어나면서 중립화 통일론, 남북협상론 등의 통일 담론의 형태로 제기되었다. 또한 박정희 정부가 한일 협정 체결을 서둘러 강행하자 학생을 비롯한 시민사회에서 격렬한 저항이 일어나면서 민족 담론이 다시 부상했다.<sup>67</sup> 이처럼 1960년대에 학생과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통일 담론과 민족 담론은 1970년대 이후에도 통일 민족주의와 민중적 민족주의 등의 논리를 내세우며 담론 지평을 확장해 나갔다.<sup>68</sup> 그런데 교과서는 리베르스쿨처럼 4.19 혁명 직후 제기된 통일 담론인 중립화 통일론과 남북협상론을 간략히 소개할 뿐 한일 협정 체결을 둘러싸고 뜨거운 쟁점이 되었던 민족 담론은 물론

65 노대환 외(2025), p. 113.

66 신주백 외(2025), p. 103.

67 김정인(2025a), pp. 120-121.

68 전재호(2022), 「한국 민족주의에 대한 인식 변화와 연구」, 『한국 현대사 연구의 쟁점』,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pp. 278-280.

1970년대 이후 민족 담론 확장의 역사를 서술하지 않는다.

- 중립화 통일론: 4.19 혁명 이후 진보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제기한 것으로 한국을 중립국으로 해서 통일을 이루자는 주장이다.
- 남과 북이 통일의 주체가 되어 외세의 간섭 없이 직접 협상하여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자주적 남북협상론도 제기되었다.<sup>69</sup>

민중 담론은 1970년대부터 민중이 개발독재에 저항하는 주체로 성장하면서 부상했다. 1980년대에는 민중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민중을 계급 연합체이자 변혁 주체로 보는 담론이 주류를 이뤘다.<sup>70</sup> 그런데 교과서는 민중 담론은 물론 민중 개념도 거의 다루지 않는다. 미래엔의 경우 식민지기 서술에서는 민중 혹은 민중운동 개념을 사용하지만 현대사 서술에서는 “1980년대 후반에는 민중가요가 일반 대중 사이에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sup>71</sup> 라고 해서 한 번 등장한다. 이 사례와 마찬가지로 현대사에서 민중 개념은 민중 문화 운동이라는 범주에 국한되어 사용된다. 리베르스쿨은 “이 시기(1980년대)에는 사물놀이나 탈춤 등 우리 전통에 토대를 둔 민중 문화 운동도 활발히 이루어졌다”라며 민중 문화 운동을 서술한다.<sup>72</sup> 천재교과서는 “농민, 노동자 등의 민중을 문화의 주체로 삼고자 하는 민중 문화 운동”<sup>73</sup> 을, 지학사는 “1980년대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민주화와 사회적·경제적 평등을 지향하는 민중 문화 운동”<sup>74</sup> 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대항 담론이자 동시에 지배담론으로도 작용했던

69 김보림 외(2025), p. 100.

70 조희연(2010), 『동원된 근대화』, 역사비평사, p. 75.

71 강승호 외(2025), p. 108.

72 김보림 외(2025), p. 123.

73 정요근 외(2025), p. 126.

74 최병택 외(2025), p. 124.

민주주의 담론을 살펴보면, 1950년대부터 한국 사회를 휩쓴 반공 민주주의와 함께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라는 프레임이 굳어졌다. 또한 양자를 자유의 유무로 구분하는 풍토가 자리를 잡으면서 반공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로 불리게 되었다. 5.16 군사 정변으로 집권한 군사정부는 행정의 민주적 절차를 중시한다며 행정적 민주주의를 내세웠고 박정희는 1963년 대통령 선거에 나서면서 민족적 민주주의 논쟁을 야기했다.<sup>75</sup> 장기 집권과 영구집권을 꾀하면서도 유신 독재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불렀다. 하지만 지식인들은 아유브 칸의 기초민주주의나 수카르노의 교도민주주의처럼 집권자가 내세우는 한국적 민주주의는 곧 독재를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민주주의는 독재자조차도 자신의 독재 정치 이념으로 한국적 민주주의를 내세울 만큼 한국인 모두가 전유하고자 한 보편 담론이었다. 동시에 역사교육에서는 지금도 가장 논쟁적인 담론이다. 2022 개정 교과과정을 개발할 때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중학교 ‘역사’ 과목과 고등학교 ‘한국사2’ 과목에 자유민주주의를 넣어 논란이 되었다.<sup>76</sup>

교과서는 민주주의 담론을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고 민주주의를 독재 정치가 훼손하고 제한한 가치 혹은 학생과 시민이 희생 속에서 지켜낸 대항적·저항적 가치를 지닌 개념으로 사용한다.

법과 절차를 무시한 개헌이 계속되면서 민주주의는 크게 훼손되었고, 이승만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은 더욱 커졌다.<sup>77</sup>

4.19 혁명은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에 이르는 전국의 학생들과 회사원, 노동자, 도시 하층민 등 시민이 폭넓게 참여해 이승만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75 김정인(2025a), pp. 120-121.

76 박상필(2023), 「2022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의 쟁점과 과제」, 『역사교육연구』 46, 한국역사교육학회, pp. 159-163.

77 강승호 외(2025), p. 82.

민주주의 혁명이었다.<sup>78</sup>

유신 체제 아래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크게 훼손되었다.<sup>79</sup>

6월 민주 항쟁은 시민들이 군부 독재 정권의 가혹한 탄압에 맞서 민주주의를 이루어 낸 사건이었다.<sup>80</sup>

한편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서사에서는 평화적 정권 교체를 절차적 민주주의의 정착으로 서술한다.

6월 민주 항쟁 이후 개헌을 통해 민주주의의 외형적 틀을 갖추었다면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를 이루어 내면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점차 정착되어갔다.<sup>81</sup>

미래엔은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서사에서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어구를 반복한다.

6월 민주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정착되었고, 국민들의 투표로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등 민주주의가 발전하였다.<sup>82</sup>

(김대중 정부 시기) 민주주의는 더욱 발전하였으며, 국가 인권 위원회와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등 인권과 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들이 설치

78 김보림 외(2025), p. 99.

79 도면희 외(2025), p. 102.

80 노대환 외(2025), p. 108.

81 김보림 외(2025), p. 133.

82 강승호 외(2025), p. 145.

되었다.<sup>83</sup>

1994년 출범한 참여연대는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등을 추구하고 소액 주주 운동이나 권력 감시 운동 등을 전개해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였다.<sup>84</sup>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서사를 서술하면서 민주화 이후 주목받기 시작한 다양한 민주주의 개념을 서술한 교과서도 있다. 동아출판, 리베르스쿨, 씨마스, 천재교과서는 풀뿌리 민주주의 개념을 소개한다. 동아출판은 생태적 민주주의를, 리베르스쿨은 디지털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한편 지배담론으로 작동했던 민주주의로 박정희의 한국적 민주주의를 소개한 교과서도 있다. 천재교과서는 “박정희 정부는 유신 체제를 ‘한국적 민주주의’로 합리화했으나 실상은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1인 독재 체제였다.”<sup>85</sup>라고 서술한다. 지학사는 박정희가 주장한 ‘한국적 민주주의’를 설명하면서 그것이 독재 체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담론이라는 점을 부각한다.

- 박정희 정부는 유신 체제를 ‘한국적 민주주의’라며 합리화하였다.
- 한국적 민주주의: 박정희 정부는 서구의 정치 풍토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애민’ 정신을 갖춘 강력한 지도자를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지지하는 정치 형태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주장하였다.<sup>86</sup>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교과서의 민주화 이전 민주주의 서사는 정치·제도, 저항·운동적 사건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쟁점적 역사 담론을 거의 다

83 강승호 외(2025), p. 117.

84 김보림 외(2025), p. 138.

85 정요근 외(2025), p. 107.

86 최병택 외(2025), p. 101.

루지 않는다. 그나마 개발 담론을 논쟁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본격적이지는 못하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민주화 이전의 민주주의 서사는 쟁점적 역사 담론에 의해 재구성되었을 때 현재사로서 힘을 갖게 된다. 지금 여기, 현실에서는 담론으로 재구성된 과거가 살아있는 역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 현대사 교육에서 쟁점적 역사 담론에 기반한 민주주의 서사의 모색은 곧 역사교육에서 논쟁성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sup>87</sup>

#### 4.2.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역사 서사화

1987년 이후 3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의 민주주의 공고화의 과정에서는 정치만이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방면에서 민주주의 진전과 이를 둘러싼 갈등이 다방면에서 노출되었다. 이 시기를 다룬 교과서의 대단원 'Ⅲ.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서사에서는 기본적인거나 중요한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역사 서사화가 시급하다. 민주화 이전 민주주의 서사가 지나치게 사건 중심적이라면,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서사에서는 오히려 인물, 사건 등 사실(史實)이 부족하다. 동아출판의 '시민사회가 성장하다'라는 학습주제의 내용을 살펴보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6월 민주 항쟁 이후 제도적 민주주의가 정착하면서, 시민들은 일상 생활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사회 문제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감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인터넷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세계 시민으로서 연대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sup>88</sup>

이처럼 일관되게 개론적인 내용으로 서술된 경우를 역사 서사라고 보는 것은 어렵다. 비상교육의 사회 양극화에 대한 서술도 살펴보면 개론적이다.

오늘날에는 빈부 격차를 사회 문제로 인식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등 경제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동반 성장 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계층 간 격차를 줄이려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도 비정규직 축소와 재벌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등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sup>89</sup>

한편 미래엔은 ‘1987년 이후 한국 사회는 어떻게 성장하였을까?’라는 제목의 코너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공고화의 성과를 설명하고 보수와 진보의 극한 갈등, 지역주의 등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제시한다. 하지만 “독재와 민주주의의 싸움이라는 과거의 이분법적 논리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에서 분출되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정치 제도와 질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sup>90</sup>라고 개론적 서술에 그치고 만다. 이처럼 현재주의적 관점에서 ‘의미있는 역사’의 속성인 학습자의 시민적 실천에 도움이 되는 역사적 문제로서의 보수와 진보의 갈등, 지역주의를 기본적인거나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기반해 다룬 교과서는 없다.

교육과정이 1987년 이후 현대사를 대주제로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서는 정치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서술이 위의 사례처럼 개론적이다.

88 노대환 외(2025), p. 132.

89 도면희 외(2025), p. 138.

90 강승호 외(2025), p. 119.

역사교육의 내용은 지식으로서의 인물, 사건과 그를 둘러싼 담론을 중심으로 역사 서사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1987년 이후 역사 서술에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역사학에서 1987년 이후 현대사를 본격적으로 연구하지 않은 풍토와 무관하지 않다. 대표적인 개론서를 살펴보면, 2022년에 나온 한국역사연구회의 『시민의 한국사2』에서는 1987년 이후 정치사, 경제사, 문화사를 다루는 성과를 보였지만 사회사는 1987년 이전을 포함해 전혀 다루지 않았다. 2024년에 나온 『세계사 속의 한국근현대사』는 ‘탈냉전기 한국 사회의 변화’라는 장에서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를 다루지만 교과서 서술보다 소략하다.<sup>91</sup> 이처럼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가 1987년 이후 현대사의 역사 서사화에 미진했던 만큼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서사의 구성이 부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서사 구성을 위해 참조할 만한 연구 성과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펴낸 『87년 이후 35년의 한국 민주주의』가 있다. 이 책의 목차를 보면 적어도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서 일어난 주요한 사건과 담론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책이 시도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역사화’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민주주의의 역사화는 성찰을 통해 미래의 민주주의를 조망하는 작업이다. 불과 30여 년밖에 되지 않은 바로 어제의 역사이지만, 현대 한국 역사에서 가장 긴 역사가 될 것이며, 점차 가장 많은 사람이 경험하고 살아온 역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와 해법은 민주화 시기 같은 더 오랜 과거가 아니라 지난 민주주의 35년의 역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sup>92</sup>

91 박찬승 외(2024), 『세계사 속의 한국근현대사』, 경인문화사, pp. 453-471.

[표 7] 『87년 이후 35년의 한국 민주주의』의 목차<sup>93</sup>

장	절
1. 민주주의를 다지다	1. 87년 개헌, 민주주의 공고화의 토대를 닦다 2. 하나회의 해체, 군부에 대한 문민통제의 길을 열다 3. 교육 민주화, 교육 현장의 침묵을 깨다 4. 과거사 청산,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5. 작업장 시민권, 지난한 여정에 놓이다 6. 지방 자치 시대가 열린다 7. 부패방지법,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다
2. 민주주의를 넓히다	8. 금융실명제, 신군부에 대한 과거청산의 길을 열다 9. 공해오염에서 환경 문제로의 확장 10. 남북 정상회담, 냉전 반공주의를 넘어서다 11. 시민사회의 성장과 분화 12. 경제 민주화, 재벌 지배구조개혁에서 한국경제의 구조 전환으로 13. 시민 주도의 민주주의: 한국형 민주주의의 진화 14. 대통령 탄핵, 주권자의 힘으로 대의정치를 통제하다
3. 민주주의를 바꾸다	15. 정권 교체, 불확실성의 제도화 16. 광장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바꾸다 17.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양당제에서 다당제로의 변화의 문을 열다 18. 성평등, 젠더 민주주의의 자리를 만들다 19. 정보기술의 발전과 대의민주주의 20. 민주화, 비대칭적 한미 관계를 조정하다 21. 진보 정당의 원내 진출, 의회정치와 진보 정치를 바꾸다 22. 참여와 협치, 수직적 의사결정을 수평적 의사결정으로 바꾸다
4. 민주주의를 묻다	23. 세월호 사건, 국가의 존재 의의를 묻다 24. 코로나19와 K-방역, 민주시민의 경계를 되묻다 25. 배제와 혐오, 인권과 평등의 의미를 다시 묻다 26. 가족의 변화, 정상가족의 규범을 넘어서다 27. 1997년 외환위기, 신자유주의의 날개를 달다 28. 정치의 사법화·사법의 정치화, 민주적 통치의 위기를 배태하다 29. 양극화, 민주주의의 토대를 허물다 30. 민주화 이후 언론의 방향을 묻다
5. 민주주의를 다투다	31. 세대정치, 지역주의를 압도하다 32. 역사전쟁, 역사가 정치의 무기가 되다 33. 무상급식논쟁,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 34. 지역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불완전한 변형 35.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이념 대립, 민주주의에 과제를 제시하다

이처럼 민주화 이전의 독재 정치와 민주화운동의 역사도 오늘의 민주주의 문제를 풀어가는데 필요하지만 지금 사회를 움직이는 민주주의 체제는 민주화 이후에 빚어진 역사의 직접적인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를 역사 서사화해 교육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리고 그와 같은 역사 서사화 과정에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공고화의 주체로서 정부와 시민사회에 주목한 기존의 민주주의 서사보다는 더 넓은 범주에서 운동 사회의 형성과 그에 기반한 주류 교체를 역사 서사화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곧 12.3 계엄을 좌절시킨 민주주의의 역량을 계보학적으로 서사화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그 민주주의의 힘은 1970년대 반독재 민주화운동에서 발원해 2000년대 광장의 촛불시위를 통해 응축된 것이었다.<sup>94</sup>

1987년 6월 항쟁 이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고화의 길을 걸었다. 민주주의 공고화를 추동한 것은 ‘운동’이었고 그것을 제도화한 것은 ‘정치’였다. 그리고 운동과 정치 영역에서 민주주의 공고화를 이끈 주체는 소위 운동권이라 불리는 ‘운동 사회’에서 배출되었다. 운동 사회는 1970년대 유신 체제에 반대하던 재야운동과 학생운동을 주축으로 형성되었다. 1980년대에 민중운동이 본격화되고 1990년대 시민운동이 성장하면서 운동 사회의 외연은 더욱 확장되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운동 사회는 진보 정당을 결성해 국회 진출에 성공했고 진보·개혁 정권의 인적인 자양분 공급지가 되었다. 나아가 2000년대 운동 사회의 확장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광장을 가득 메우고 촛불을 들었던 시민이었다. 2016 촛불시위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고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주류가 친일·독재·반

9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엮음(2023), 『87년 이후 35년의 한국 민주주의』, 한울아카데미, pp. 4-5.

9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엮음(2023), p. 11.

94 김정인(2025b), 「기रो에 선 민주주의, 역사의 선택」, 『그러므로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사이드웨이, p. 40.

공에 기반했던 보수세력에서 민족-민중-민주, 삼민주주의의 지향 아래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계보를 잇는 진보·개혁 세력으로 교체되었음을 천명했다. 그리고 2024년 겨울에도 광장 시민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폐쇄적 독재국가로 전락할 뻔한 대한민국을 구했다. 그것은 곧 지금 여기의 격변이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전환기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한국 현대사 교육에서는 ‘지금 여기’ 12.3 계엄을 막아낸 민주주의적 계보와 동력에 대한 서사를 요구받게 될 것이다.

한편 현재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서사에서 과거사 청산과 역사 전쟁은 중요한 주제다. 교과서는 친일과 청산의 노력과 좌절은 하나의 학습주제로 다루고 4.3 사건, 진보당 사건, 제2차 인혁당 사건, 5.18 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과거사 청산 내용은 해당 사건을 서술하면서 덧붙여 설명한다. 반면 민주화 이후 과거사 청산 활동과 관련해서는 동아출판, 리베르스쿨, 미래엔, 비상교육처럼 정부별 민주화 정책 서술에 포함하거나 씨마스, 천재교과서, 해냄에듀처럼 학습주제로 설정해 서술하는 등의 차이를 보인다. 씨마스는 ‘과거사 청산을 통한 국민 통합 노력’이라는 학습주제에서 김영삼 정부 이래 최근까지 정부 주도의 과거사 청산 노력을 서술하면서 그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일제와 권위주의 시대의 과오에 대한 역사적 정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과거사 청산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일제와 과거사의 진실을 밝히고 정리함으로써 용서와 화해를 통한 국민 통합을 이루고 미래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이었다.<sup>95</sup>

천재교과서도 ‘과거사 정리를 위해 노력하다’라는 학습주제를 배치하여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에 대

— [www.kci.go.kr](http://www.kci.go.kr)

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 정부 위원회들을 소개한다.<sup>96</sup> 해냄에듀는 ‘과거사 청산을 위한 노력’이라는 학습주제에서 “인권 의식이 성장하면서 과거사 청산에 대한 요구도 높아졌다.”라고 평가하면서 시민사회의 과거사 청산 노력으로 『친일인명사전』 발간을 소개한다.

민간에서도 과거사 청산을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다. 국회에서 『친일인명사전』 편찬 예산이 전액 삭감되자 시민들은 자발적인 모금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민들의 참여로 2009년 『친일 인명사전』이 발간되었다.<sup>97</sup>

동이출판은 ‘과거사 정리를 위한 움직임’ 코너를 두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의 출범과 활동을 소개하며 과거사 정리에 대해 “민주주의를 안정시키고 국가와 정부, 정치 공동체의 도덕성을 높여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sup>98</sup>라고 서술한다.

이처럼 과거사 청산은 2018년 개정 교육과정부터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주요한 서사로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정부의 과거사 청산을 위한 정책 서술에 치중되어 그를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리고 민주화 이후 과거사 청산은 역사 전쟁과 맞물리며 진행되었는데 역사 전쟁을 서술한 교과서는 없다. 역사 전쟁의 발발 배경과 전개 과정, 그리고 그 영향을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민주화 이후 과거사 청산은 물론 민주화 이전 민주주의 서사가 제기하는 쟁점적 역사 담론의 서술과 맞물려 있기도 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과서의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서사의 재구성은 기본적인거나 중요한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역사 서사화를 대안제로

96 정요근 외(2025), p. 140.

97 조한경 외(2025), p. 135.

98 노대환 외(2025), p. 134.

한국 사회 주류 교체라는 변화, 과거사 청산과 역사 전쟁 등의 현재사적 역사 문제를 어떻게 현재주의적 역사교육의 내용으로 주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 기반해 이뤄져야 한다.

## 5. 맺음말

교과서의 민주화 이전 민주주의 서사는 독재 정치 대 민주화운동의 이분법적 구도로 구성되어 있다. 독재 정치는 민주화운동의 배경으로 배치되며,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 항쟁 등 사건 중심으로 서술된다. 그러나 반공 담론, 개발 담론, 민족 담론, 민중 담론, 민주주의 담론 등 쟁점적 역사 담론에 대한 서술은 거의 없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서사는 정부와 시민사회를 민주주의 공고화의 주체로 설정하고 평화적 정권 교체를 강조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서술이 개론적이며, 기본적이거나 중요한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구체적인 역사 서사화가 부족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고는 민주주의 서사 재구성을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민주화 이전 서사에서는 현재사적 쟁점이 된 역사 담론을 다룰 것, 둘째, 민주화 이후 서사에서는 기본적이거나 중요한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구체적 서사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1987년 이후 운동 사회의 형성과 주류 교체, 과거사 청산과 역사 전쟁 등을 역사 서사화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본고에서는 교과서의 민주주의 서사를 민주화 이전과 민주화 이후 시기로 나누어 분석하고 한국 현대사 교육에서의 민주주의 서사의 재구성 방안을 시론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해방 이후 80년이라는 시간의 역사, 즉 한국 현대사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시점이 도래했음을 규명하고자 했다.

한국사 교육은 오래도록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이뤄졌다. 한국 현대사

교육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제 남과 북의 국가를 하나의 민족으로 인식 하던 시선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역사교육에 반영해야 할지를 검토할 때가 왔다. 역사교육계에서는 201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한국 현대사 교육에 대한 고민을 지속해 왔다. 하지만 아직은 한국 현대사 교육의 매개 수단인 교과서의 서술에는 충분히 투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신중한 태도는 2000년대 이후 한국 현대사 교육이 본격화 되는 동시에 역사 전쟁이 일어나면서 정치적·사회적으로 제기된 논쟁의 소모성을 체감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의 격변은 민주화 이전 민주주의 서사는 관성대로 사건사 중심으로만 구성하고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서사는 개론적 서술에 기대면서 역사 전쟁조차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한국 현대사 교육에 변화를 요구한다. 이분법적이고 인과론적이며 목적론적인 진보 서사를 넘어 복합적 역사 현실로서 민주주의 서사를 재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12.3 계엄 이후 6.4 대통령 선거에 이르는 6개월을 겪은 후 ‘지금 여기’의 경험을 어떻게 의미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공론장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한국 현대사 교육에서도 ‘나와 우리의 경험의 의미화/역사화’라는 차원에서 민주주의 서사를 성찰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많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참고문헌

### 자료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탄핵 헌법재판소 결정문」(2025.4.4.).  
교육부(1997), 『사회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강승호 외(2025), 『고등학교 한국사2』, 미래엔.  
김보림 외(2025), 『고등학교 한국사2』, 리베르스쿨.

- 노대환 외(2025), 『고등학교 한국사2』, 동아출판.  
 도면희 외(2025), 『고등학교 한국사2』, 비상교육.  
 신주백 외(2025), 『고등학교 한국사2』, 씨마스.  
 정요근 외(2025), 『고등학교 한국사2』, 천재교과서.  
 조한경 외(2025), 『고등학교 한국사2』, 해냄에듀.  
 최병택 외(2025), 『고등학교 한국사2』, 지학사.

「한국이 어찌다…2년 연속 “독재화되고 있다” 박한 평가」, 『한겨레』, 2025. 3. 18.

## 논저

- 김정인(2025a), 『모두의 민주주의』, 책과함께.  
 김정인(2025b), 「기रो에 선 민주주의, 역사의 선택」, 『그러므로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사이드웨이.  
 강화정(2021), 「학생의 삶에 중심을 둔 현대사 교육, 어떻게 만들어갈까?」, 『역사교육연구』41, 한국역사교육학회.  
 강화정(2018), 「한국사 교육과정에서 ‘1987년 이후의 역사’ 서술의 필요성과 구성 방안 모색」, 『역사교육연구』 30, 한국역사교육학회.  
 강화정(2015), 「역사 교사의 민주주의 인식과 서사 형성」, 『역사교육연구』 21, 한국역사교육학회.  
 강화정(2014), 「교과사 한국사 교과서의 현대사 서술과 민주주의 교육」, 『역사교육연구』 20, 한국역사교육학회.  
 김한중(2024), 『역사교육 강의』, 책과함께.  
 김한중(2023), 「‘의미있는 역사’에 기초한 중·고등학교 역사교수요목 구성방안」, 『역사교육연구』 45, 한국역사교육학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엮음(2023), 『87년 이후 35년의 한국 민주주의』, 한울아카데미.  
 박상필(2023), 「2022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의 쟁점과 과제」, 『역사교육연구』 46, 한국역사교육학회.  
 박찬승 외(2024), 『세계사 속의 한국근현대사』, 경인문화사.  
 송충기(2020), 「현재주의(presentism)과 ‘현재사(history of the present)」, 『역사교육』 154, 역사교육연구회.  
 오제연(2016), 「연구의 확장, 새로운 모색, 대화의 부재」, 『역사학보』 231, 역사학회.  
 이대수(2005), 「한국의 정부와 시민사회: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NGO연구』 3-1, 한국 NGO학회.  
 전재호(2022), 「한국 민족주의에 대한 인식 변화와 연구」, 『한국 현대사 연구의 쟁점』,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조희연(2010), 『동원된 근대화』, 역사비평사.

한국역사연구회(2022), 『시민의 한국사2』, 돌베개.

원고 접수일: 2025년 10월 16일, 심사완료일: 2025년 11월 10일, 게재 확정일: 2025년 11월 11일

## ABSTRACT

# Contemporary Korean History Education and the Democracy Narrative

Kim, Jeongin\*

This study analyzes the narrative of contemporary Korean democracy in eight *High School Korean History 2* textbooks based on the 2022 revised curriculum and proposes reconstruction from a presentist perspective. The pre-democratization narrative is structured around the dichotomy of dictatorship versus democratization movements, focusing on events while lacking discussion of contentious historical discourses such as anti-communism, development, nationalism, and democracy discourses. The post-democratization narrative positions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as the main actors in consolidating democracy and emphasizes peaceful power transitions but remains at the level of general descriptions without concrete historical narratives. This study suggests incorporating contentious historical discourses for the pre-democratization period and developing fact-based narratives for the post-democratization era.

**Keywords** Korean Contemporary History Education, Democratic Narrative, Presentist History Education, High School Korean History Textbook, Contentious Historical Discourse, Historical Narrativization

---

\*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